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성명

수험번호

3

-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써 넣으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써 넣고, 또 수험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과목을 선택한 순서대로 풀고, 답은 답안지의 '제1선택'란에서부터 차례대로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 다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법이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민법 제162조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민법 제245조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보 기>

- ㄱ. 국가 목적에 맞추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ㄴ. 법의 잣은 변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ㄷ. 법에 따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ㄹ.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기 위한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신문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갑은 대리인을 통해 구속영장 발부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따지는 구속적부심을 ○○ 지방 법원에 청구했다. 갑은 청구서에서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적도 없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다. 또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 국가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인터넷에 게시했다는 것만으로는 구속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 (후략) ...

<보 기>

- ㄱ. 갑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으려 하였다.
ㄴ. 국가는 적법 절차의 원리를 무시하였다.
ㄷ. 갑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ㄹ. 법원은 갑의 주장에 대해 '청구 내용에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청구를 배척하였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3.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과 을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혼인 신고만 하고 살다가 갑이 갑자기 교통 사고로 사망하였다. 갑의 사망 당시 을은 임신 7개월이었고, 태아는 3개월 후 건강하게 태어났다. 한편, 갑의 부모님은 고향에서 두 분이 농사를 지으며 살고 계신다.

<보 기>

- ㄱ. 갑의 재산 상속권자는 을과 갑의 부모이다.
ㄴ. 갑과 을은 법률혼 관계이며 태아는 상속권이 있다.
ㄷ. 갑의 부모가 부양청구권을 행사해도 을은 부양 의무가 없다.
ㄹ. 갑의 사망과 동시에 갑의 부모와 을의 인척 관계는 종료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4. 다음 사례와 관련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지방 법원은 A종합병원 성형외과 의사 갑에게 쌍꺼풀 수술을 받은 후 실명(失明)한 을이 A종합병원과 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종합병원은 5천만 원, 갑은 1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갑은 간단한 수술이기에 사전 검사 없이 수술을 하였는데, 을의 한쪽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정밀 검사 결과 수술 도중 갑의 실수로 인해 을의 각막이 손상되었고, 실명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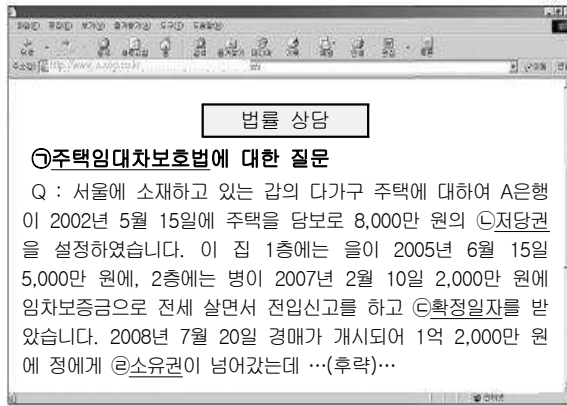
- ① 갑의 행위는 업무상 과실이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
② 갑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판결에 불복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갑의 의료 행위와 을의 실명 간 인과 관계를 인정했다.
④ 을은 갑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물었다.
⑤ 위 사건은 A종합병원과 갑의 공동 불법 행위에 해당하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

5. 다음에서 A국이 추구하는 법치주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국은 지도자가 바뀌어도 국민을 위한 법 적용이나 집행은 달라지지 않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통치자의 마음대로 제한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① 국가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정당성보다는 합법성을 중시한다.
②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③ 법의 형식뿐만 아니라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되어야 한다.
④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 목적이요, 그 제도적 기초는 권력 분립이다.
⑤ 이 원리의 실현을 위해 국가 기관의 권력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가 강조되어야 한다.

【6~7】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6. 위 사례와 관련하여 소액임차인에 대한 최우선 변제금이 아래와 같을 때, 이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단, 경매 비용 및 세금은 고려하지 않음) [3점]

담보물권 설정일	지역	소액보증금 범위	최우선 변제금
2001. 9. 15 ~ 2008. 8. 20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4,000만 원 이하	1,600만 원
	광역시 (군지역과 인천시 제외)	3,500만 원 이하	1,400만 원
	그 밖의 지역	3,000만 원 이하	1,200만 원

※ 최우선변제권 -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경매신청 등기 전까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최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

<보 기>

- ㄱ. 최우선 변제권은 을, 병에게 보장되는 권리이다.
 ㄴ. 병의 최우선변제권에 따른 변제금은 1,600만 원이다.
 ㄷ. 을은 저당권 설정권자인 A은행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ㄹ. 을이 경매 낙찰로 인해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변제금은 2,400만 원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에 따르면 임대인은 2년 미만의 임대 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은 민법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③ ㉢은 사용, 수익할 수는 없으나 조건부로 처분만 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④ ㉢을 받지 않아도, 대항력을 갖춘 경우라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⑤ ㉢의 권리 변동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8. 다음 사례에서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이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은 남편 을과 함께 시아버지 정을 모시고 미혼인 외아들 병을 키우며 생활하였는데, 얼마 전 을과 병이 고속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동시에 사망하였다. 을은 2억 원의 전 재산을 사회 단체에 모두 기부하겠다고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을 남겼고, 5천만 원의 빚이 있다.

<보 기>

- ㄱ. 동시사망은 반증만으로는 그 추정을 뒤집을 수 없다.
 ㄴ. 을이 병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는 것이 입증되면 갑이 단독 상속인이 된다.
 ㄷ. 교통사고 배상금이 있을 경우, 을이 받을 배상금의 3/5과 병의 배상금은 갑의 몫이다.
 ㄹ. 상속권자는 갑, 정이며 유류분을 주장하여 갑은 4,500만 원, 정은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만 17세인 갑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을의 가게에서 최신형 휴대폰 구입비 40만 원과 가입비 5만 원을 지불하였다. 이를 알게 된 갑의 부모는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니 매매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을에게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보 기>

- ㄱ. 갑의 부모는 을이 거절하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ㄴ. 계약 취소 시 휴대폰은 사용하던 상태에서 반환하면 된다.
 ㄷ. 갑은 휴대폰을 사용하였고 가입비도 납부하였으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ㄹ. 을은 계약 취소 시 이미 납부한 휴대폰 대금과 가입비는 되돌려주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다음 자료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법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Q : 아동들은 몇 시에 공장으로 출근합니까?

A : 새벽 3시에 출근해서 밤 10시 정도에 일을 마칩니다.

Q : 19시간의 노동 사이에 휴식시간은 어느 정도 주어집니까?

A : 아침 식사 15분, 점심 식사 30분, 저녁 시간 15분입니다.

- 1830년대 영국 노동위원회 증언 중 -

- ① 사회 정의와 경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②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른 재산권 보호를 위해 등장하였다.
 ③ 경제 활동에 대하여 국가가 중립을 유지하는 계기가 되었다.
 ④ 경제 질서의 합리화를 위해 공법의 사법화 현상으로 나타났다.
 ⑤ 근대 시민법 질서를 부정하며, 자본주의의 모순점을 수정하는 것이다.

11. 다음 법조항의 해석과 관련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민법 제4조 (성년기)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 민법 제826조의 2 (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보 기>

- ㄱ. 성년의제의 효력은 법률혼과 사실혼을 구별하지 않는다.
ㄴ. 혼인을 한 미성년자가 이혼을 하면 성년의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ㄷ.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만 18세의 혼인한 자를 여전히 미성년자로 취급한다.
ㄹ. 혼인을 한 미성년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하지 않고, 민법상 성년자와 동일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그림에서 을이 중시하는 권리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 ㄱ. 산업재산권의 한 종류이다.
ㄴ. 정신적 산물을 객체로 한 사법(私法)상의 권리이다.
ㄷ. 자연인과 법인 모두 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ㄹ. 이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형사 처벌의 대상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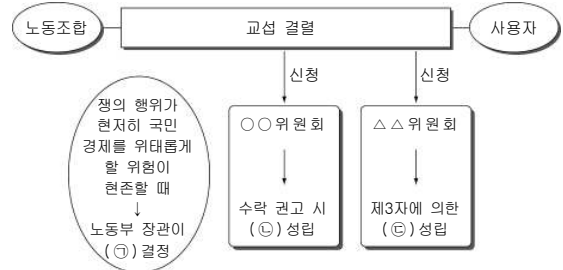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다음 사례와 관련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멜라민은 유기화합물질로 플라스틱 원료의 생산에 사용되는데 A국에서는 최근 멜라민 오염 분유 파동과 관련해 여러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A국에서 수입한 유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모임을 만들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 ① 피해자들은 불공정 거래 행위의 규제를 요구할 것이다.
② 피해자들은 권익 수호를 위해 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③ 피해자들은 물품의 사용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공정한 절차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피해자들은 한국소비자원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에도 소비자 구제 요청을 할 수 있다.
⑤ 멜라민 파동은 소비자가 물품을 사용함에 있어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이다.

14. 그림은 노동쟁의 해결을 위한 절차도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 ㄱ. ㉠은 공익 사업에 관한 것이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할 때 요구된다.
ㄴ. ㉡의 결과로 합의된 문서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ㄷ. ㉢은 분쟁 당사자 간에 제3자가 중개하여 화해, 타협이 성립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나 구속력이 없다.
ㄹ. ㉠, ㉡, ㉢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5. 다음 자료에서 도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피고인 의사의 확인)
① 배심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중략) ...
제16조 (배심원의 자격)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제18조 (직업 등에 따른 제외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심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
2.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 (중략) ...
제46조 (재판장의 설명·평의·평결·토의 등)
③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참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은 심리에 참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 재판장은 양형에 관한 토의 전에 처벌의 범위와 양형의 조건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 (후략) ...

- ① 배심원들의 평결 과정은 재판을 신속하게 한다.
② 배심원들의 의견은 법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결정짓는다.
③ 만 20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④ 국민 참여 재판 적용 여부에 대해 피고인의 의견을 반영한다.
⑤ 배심원들은 평결을 하기 전에 언제나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6. 밑줄 친 제도와 관련된 필자의 견해에 부합하는 주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공무원 시험에서 국가 유공자의 자녀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입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가산점을 받기 위해 자녀가 없는 국가 유공자의 양자로 들어간다고도 합니다. 국가 유공자의 자녀에게까지 가산점을 주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 기>—

- ㄱ. 능력에 따라 실질적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
 ㄴ. 헌법에 보장된 공무 담임권을 침해할 수 있다.
 ㄷ. 합리적 차별을 위해 특수계급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ㄹ. 훈장 등의 영전(榮典)은 이를 받은 본인에게만 효력이 있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7. 다음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지난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는 전남 완도군이 사수도(泗水島)를 장수도라고 부르면서 30년 넘게 관할권을 주장하자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945년 8월을 기준으로, 당시 제주도 지정 공고에만 사수도가 등록되어있고, 특별한 오류 또한 없어 사수도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부속 섬으로 인정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 기>—

- ㄱ. 지방 자치 단체 간의 권한 다툼을 다룬 것이다.
 ㄴ. 국가 권력에 대한 행정상 내부적 통제 수단이다.
 ㄷ. 사인(私人)은 위 심판 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ㄹ. 행정 소송 중 행정 구역 관할권 다툼을 해결하는 기관 소송에 속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다음 자료에서 정부가 허용하려는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일보 200×년 ○○월 ◇◇일	
 <p>특수형태 근로자의 권리</p> <p>노동조합법상 근로자</p> <p>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허용</p>	<p>정부는 ‘특수형태 근로자’인 골프장 경기 보조원(캐디)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물론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파업이나 태업 등을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까지도 허용할 방침이다....(후략)...</p>

- ① 모든 근로자에게 제한 없이 허용되는 권리이다.
 ② 정당한 쟁의 행위라도 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③ 근로 기준법에서는 이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④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 포괄적 권리이다.
 ⑤ 이 권리는 헌법상의 명문 규정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19. 다음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헌법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나) 국가배상법 제5조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① (가)는 국가 무책임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② (가)에서 공무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나)의 요건에는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으로 특별한 희생이 있어야 한다.
 ④ (나)에서 공공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상 하자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어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
 ⑤ (가), (나) 모두 행정쟁송 제도에 속하며,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야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해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지방 법원은 “피고 회사가 덤프트럭 등을 집중 투입하여 이 사건 양식장 앞의 야적장에 적치된 토사를 양식장 앞 도로를 통하여 대량 운반하면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양식장에서 승어가 집단 폐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①항에 의하여 환경오염의 하나인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원고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보 기>—

- ㄱ.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를 통한 구제보다 신속하고 간편하다.
 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ㄷ. 피고 회사의 환경 오염이 무과실로 입증되었다면 배상 책임이 없다.
 ㄹ. 환경 오염에 대한 사법(私法)적 구제 방법으로 사후(事後)적 구제 수단의 성격을 지닌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